



[금융] 회계발전 공로 윤종규 KB금융 회장 '철탑산업훈장' 05



Life



[산업] KT 5G 초저지연기술 세계 첫 성공 08

# 서울시 공간 풀어 경제활력... 내년 40兆 육박 '슈퍼예산'

## 2020 서울시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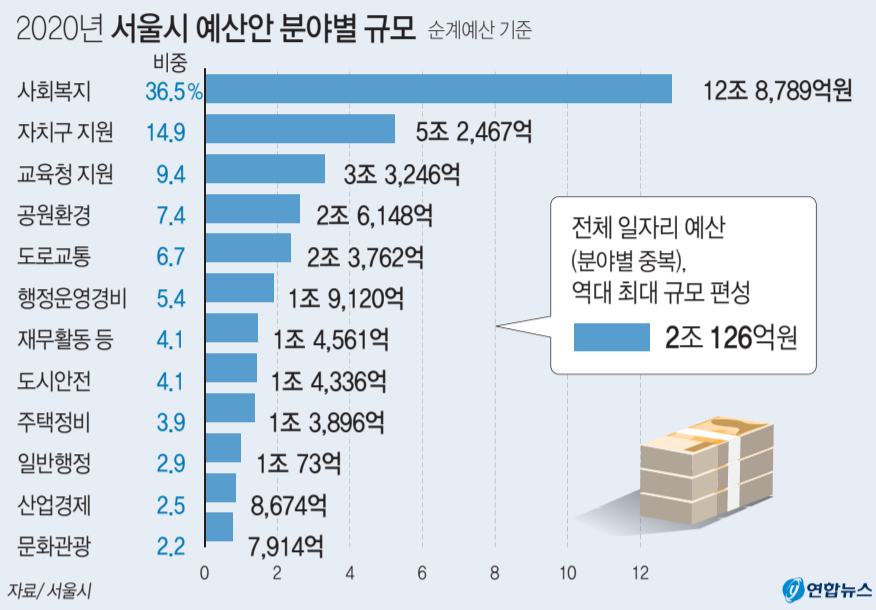
내년 예산 올해보다 10.6% 늘려 사회복지 예산 사상 첫 12兆 돌파 신혼부부·청년 등 7대 분야 집중

서울시가 내년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사상 첫 12조원을 돌파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은 268만원, 1인당 시세 부담액은 195만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은 숫자로 표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라며 "누군가는 재정을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예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의 문제다"고 말했다.

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안전돌봄체계 실현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의 7대



분야에 집중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22%로 늘어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 여력을 비축한 재정 우등생이다"며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4년 연속 AA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 이어 "재정 안정성에 문제없다.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알뜰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4%(1조7215억원) 늘어난 12조8789억원으로 12조원 선을 처음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올해(1조5810억원) 대비 27.3% 증가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31일 오전 서울시장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근로에 143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주거지원에 2조4998억원을 편성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에 1조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3200호 공급에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에 4085억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360억원을 투입한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은 아동

수당 지급(4369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90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지원(826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원) 등에 쓰인다.

청년 지원에는 497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3만명 지원에 904억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에 40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4억원을 배정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2849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 지원에 463억원, 양재R&D 혁신지구 육성에 192억원, 혁신성장펀드 출자에 520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8111억원을 편성했다.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2658억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에 2227억원, 지하철공기질 개선에 106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집·학교·직장과 10분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3324억원을 배정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 삶에 보탬이 되고자 최대한 확대 편성했다"며 "약속한 대로 사람에게 투자해 서울 경제발전에 발판이 되고 시민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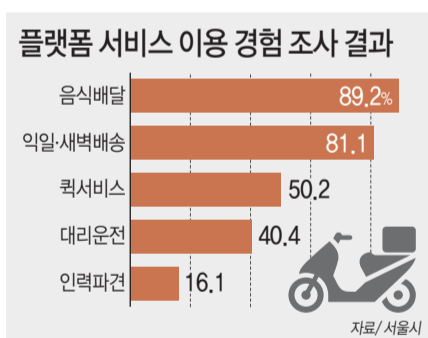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민 10명 중 9명 "플랫폼 노동 잘 몰라"

### 노동 개념 인지 못해... 대책 필요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음식배달, 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민의 90%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통해 상품처럼 거래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서울시는 31일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6일 서울 거주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민의 86.9%는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플랫폼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89.2%로 가장 많았다.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가사도우미와 같은 인력파견 서비스(16.1%)가 뒤를 이었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57.7%),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3%) 등 전체 응답자의 90.7%가 플랫폼 노동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오는 11월 3일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토론회를 연다.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한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대표,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박원순, 주민들과 '광화문광장' 끝장토론

### 광장 인근 방문, 주민 의견 청취

박원순 시장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선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11월 1일 종로구 삼청동과 사직동, 3일 청운효자동·부암동·평창동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31일 밝혔다.

박 시장은 각 동의 상가, 음식점,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찾아가 주민 의견을 듣는다. 3일 오후 3시30분 종로구청 강당 한우리홀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쟁점 사항을 모아 합동 토론회를 가진다.

박 시장이 주재하는 토론회에는 광화문 인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간제한 없이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현장으로 찾아가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재 문제점, 주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담겠다"며 "이와 별개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지난 1차에 이어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 쌍문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115세대 들어선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우선공급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115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쌍문동 88-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문역 인근 612㎡ 규모 부지에 총 115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처리 적발

### 건축물 50개소 수사 총 7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의무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

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고,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